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17.

발 의 자 : 태영호 · 신원식 · 지성호
서정숙 · 윤두현 · 김태호
김영식 · 조수진 · 김기현
한기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. 재단에 따르면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 이는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재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임.

이에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,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5호·제6호 및 제11조의2 신설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무연고청소년”이란 보호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6. “보호자”란 무연고청소년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무연고청소년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무연고청소년 보호)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-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그 밖에 무연고청소년의 건강, 생활관계, 재산상황, 보호자가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, 해당 무연고청소년과의 이해관계의 유무(법인이 보호자가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,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)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,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,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연고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보호자의 선정 기준과 선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“ <u>무연고청소년</u> ”이란 <u>보호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</u> 6. “ <u>보호자</u> ”란 <u>무연고청소년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무연고청소년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</u> <u>제11조의2(무연고청소년 보호) ①</u> <u>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그 밖에 무연고청소년의 건강, 생활관계, 재산상황, 보호자가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, 해당 무연</u>

고청소년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(법인이 보호자가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,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)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,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,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연고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

여야 한다.

⑤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보호자의 선정 기준과 선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